

쌀 협상 국정조사 평가 및 쌀 협상 국회비준 동향

쌀 협상 국정조사 특위는 여·야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이번 쌀 협상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도 못한 채 국정 조사를 마무리 했다. 또한 국회는 통외통위에 상정된 쌀 협상 국회비준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.

이에 이번호에서는 쌀 협상 국정조사 평가 및 쌀 협상 국회비준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한농연 대응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.

1. 들어가며

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특위’는 15일 여야간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이견으로 단일 결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채 35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.

특위는 조사활동 마지막 날에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, 쌀 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열린우리당과 이면합의가 있었던 만큼 협상 및 발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.

이에 따라 각 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.

그러나 한달 남짓 한덕수 부총리 등 중인 31명, 참고인 5명을 대거 동원하고도 철저한 사실규명과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이번 쌀 협상 국정조사는 대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.

또한 쌀 협상 국회비준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국내대책은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.

2.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

□ 농업계와 내부 협상에 관련된 문제점

○ 농업계와의 내부 협상에 관련된 문제점

- 협상 대책 실무추진단 체계 내에 농업계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

○ 작년 12월 말 양자 협안 관련 이면합의 사항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

- 이미 중국과 이면합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 한농연 등 농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서

명 날짜만 나중으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

○ 협상주도 부서와 관련 담당 부서 간의 시스템의 문제점

- 쌀 협상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역할을 해야 했던 '대외경제장관회의', 보좌를 위한 '실무조정회의', '경제차관 간담회'가 단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었음

□ 쌀 협상 관련 정부의 협상 전략상 문제점

○ 쌀 협상 이면합의 사항에 대한 효력 관련

- 정부가 쌀협상이 끝난 상황에서 이면합의 효력에 대해 실무 책임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총체적인 정부 협상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

○ 자동관세화론 및 관세화의무 발생론의 문제점

- 장기갑 의원은 이에 관련하여 법률회사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



쌀 협상 국정조사 평가 및
쌀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
대토론회 개최

□ 쌀 협상 이면합의 사항 관련

○ 협상 상대국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및 수입검역절차 완화 문제

- 정부의 해명대로 협상 상대국과의 이면합의 관련 사항이 아무런 실익이 없었다면, 협상 상대국들은 수입검역절차 완화나 수입위험평가의 조속한 실시와 같은 요구 사항을 강력히 제기하지 않았을 것임

○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

- 미국에서는 최근까지 광우병 의심소가 발생 사례가 보고되는 등 심각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수입위험평가 절차는 이미 4단계까지 완료되었음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음. 현재는 실질적인 수입 허용을 위한 절차인 5단계가 진행되고 있음

○ 중국산 사과·배 등의 수입위험평가 관련

- 중국은 자국산 사과·배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병충해 무발생지역인 해발 1,100m 고지대에 수출용 사과단지를 조성하는 등 까다로운 검역 조건을 통과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

○ 인도·이집트산 식량원조용 쌀 추가 구매 관련

- 국별 쿼터 물량 배정시 배제된 인도(인도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출 실적이 있음)가 작년 12월 말 WTO에 이의를 제기. 이에 정부는 물량이나 조건 등을 불문하고 인도·이집트 정부와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, 협상 전략 및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드러냈음

○ 관세화 유예 5년 후 중간점검 실시 규정 관련

- WTO 농업위원회 등과 같은 공식적인 점검 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점검 내용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향후 분쟁 발생의 개연성이 높음

3. 한농연 요구사항

○ 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

- 쌀 협상 과정 및 결과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근본적인 국내 쌀 산업·농가 소득안전 대책 수립, 협상 책임자 처벌, 협상 시스템의 철저한 정비 등 가시적 조치가 없이 쌀 협상 국회비준을 강행하면 안 됨

○ 농업통상협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

- 향후 통상협상에서 사전영향분석, 협상대상국 선정, 협상전략 수립, 협상안의 심의·의결, 국내대책 마련 시 농민 참여권 100%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. 특히 이번 쌀 협상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

○ 실효성 있는 쌀산업 및 농가 보호 대책 추진

- ▲ 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을 ha당 130만원으로 인상 ▲ 밭농업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 ▲ 공공비축제 물량을 확대하고 지역 간 가격차 극복을 위한 대책 시행
- ▲ 농가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 ▲ 정책자금 신규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 사업 지원 ▲ 식량자급률 법제화, 쌀 수급 및



쌀협상 국회비준반대 및 국내 쌀산업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 농민대표자 투쟁 선포대회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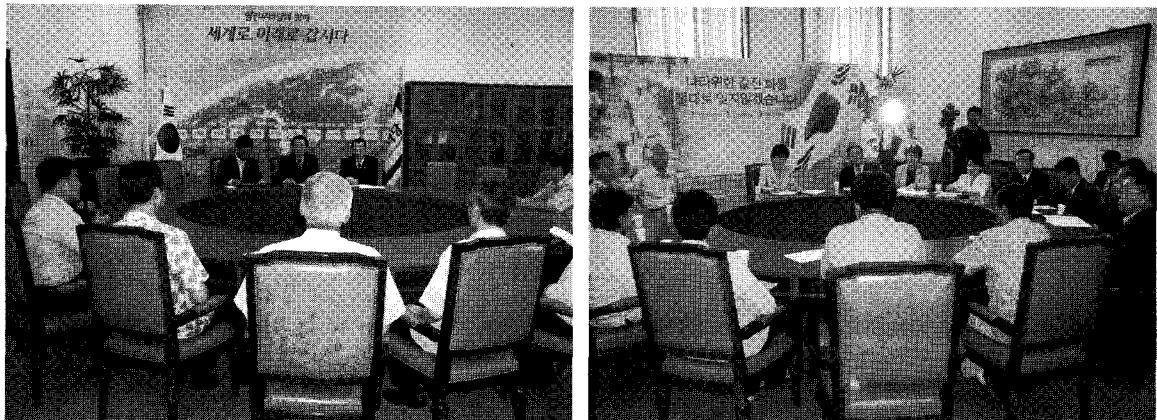
생산비 절감 등 쌀산업종합대책을 수립 ▲ 매년 300만석 이상 대북 쌀 지원을 실시하여 남북농업교류를 활성화 ▲ ‘우리 농산물 사용’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 ▲ 쌀의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, 쌀 생산비 인하 정책 추진

○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

-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의식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. 이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광우병 청정지역이므로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

○ 과수산업 종합대책 수립해야 함

- 중국은 ‘병충해 무발생지역 선정’, ‘해발 1,100m 고지대 사과단지 조성’ 등 검역 조건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.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



6월 22일 농민대표들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.